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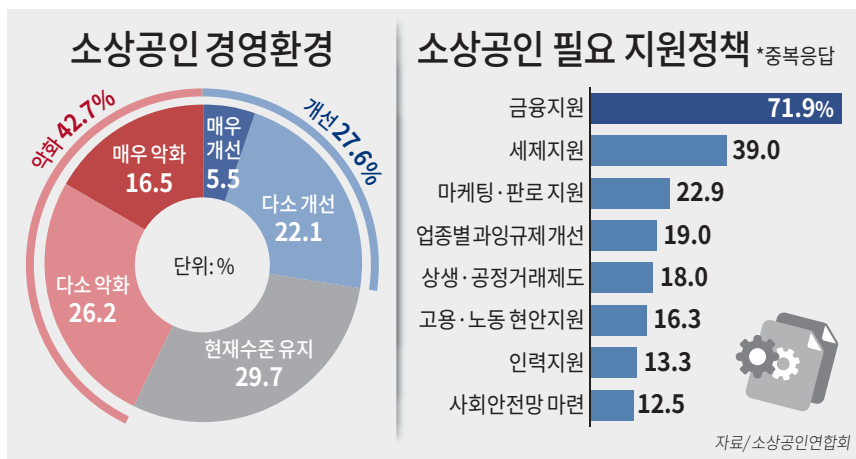
소상공인·중견기업 2면

소상공인 43% “경영환경 악화” 전망… 금융비용 부담 심화

소상공인聯, 1073곳 실태조사
자금사정, ‘악화’ 69% ‘원활’ 6%
높은 이자부담·대출한도 부족 문제
정책 1순위, 금융지원 72% 응답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개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자금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이자 부담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107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악화’ (다소 악화+매우 악화)가 42.7%로 ‘개선’ (27.6%) 전망

보다 많았다. ‘현 수준 유지’는 29.7%였다.

올해 자금 상황 전망은 ‘어려울 것’ (다소 어려움+매우 어려움)이란 답변

이 69.1%로, 6%에 그친 ‘원활할 것’ (매우 원활+다소 원활)이란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통’은 24.9%였다.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선 72.9%가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는 ‘금융비용’ (48.7%)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인건비 (38.1%) ▲원부자재비 (36.7%) ▲임대료 (33.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금·금융 관련 예상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이자 부담’ (59.4%)과 ‘대출한도 부족’ (49.7%)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원하는 지원정책 (복수응답)은 ‘금융 지원’이 71.9%로 1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세제 지원’ (39%)과 ‘마케팅·판로 지원’ (22.9%) 등이 주를 이뤘다.

고용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51.8%) 등의 이유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절반을 훌쩍 넘는 57.3%였다. 불확실성이 커지며 올해 고용 계획에 대해 ‘미정’이라는 답변도 22.8%로, ‘인원 축소’ (11.8%)나 ‘인원 확대’ (8%)를 능가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비롯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견기업 절반 이상 “투자계획 없다”… ‘시장 불확실’ 여전

중견련, 650社 대상 설문조사
투자계획 ‘없다’ 53.1%, ‘있다’ 46.9%
상반기 투자 계획, 하반기보다 많아
투자활성화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원해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해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보다 ‘투자 계획 없음’이 다소 늘었다. 투자를 ‘하겠다’는 곳은 해외보다 국내가 더 많았고 주로 설비투자과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R&D 설비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투자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53.1%로 ‘있다’ (46.9%)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1월 조사 당시 ‘있다’는 49.6%로 올해보다 다소 많았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제조업 (44.4%)과 비제조업 (35.1%) 모두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1순위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제조업은 ‘경영실적 악화’ (21.5%), 비제조업은 ‘투자 필요 업종 아님’ (33.2%)도 투자 계획이 없는 주요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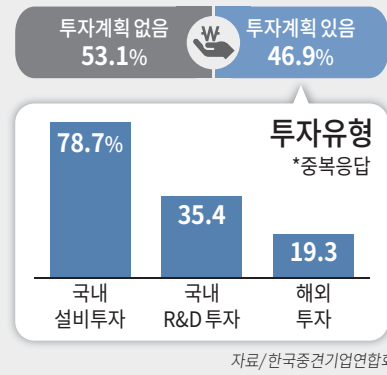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힌 중견기업들은 상반기에 ‘투자하겠다’는 답변 (73.8%)이 하반기 (67.9%)보다 다소 많았다.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늘리겠다’가 46.2%로 ‘줄이겠다’ (16.4%)보다 다소 앞섰다.

투자 규모 확대 요인으로는 ▲주력 사업 확장 (29.1%) ▲노후 설비 개선·교체 (22%) ▲신사업 진출 강화 (21.3%) ▲해외 시장 진출 확대 (20.6%) 등을 지목했다.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응답기업의 37.6%였다. 투자 규모는 100억~300억원 사이가 60%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도 10.4%에 달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정부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R&D 설비투

중견기업 투자계획과 유형



자 세제 지원 확대 (40.3%)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 (18.9%) ▲금리 인하 (15.8%) ▲정책 금융 확대 (11.7%) 등을 꼽았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에 고발요청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 개최
숙박업소에 쿠폰 미사용분 미환급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인팩과 계열사인 인팩이피엠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 (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승호 기자

여기어때컴퍼니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2017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 (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역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해 총 5억 3519만원 등 두 회사의 위법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총 6억 716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 겸 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했다.

벤처업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반발

디지털자산기본법 재검토 요청
“인위적 지분규제 혁신 동력 저해”

벤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움직임에 대해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현실을 반영,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며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 분산 기준 도입을 밝힌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지분 분산은 규제가 아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강제적인 지분 매각 대신 기업공개 유도를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유 분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의지를 꺾지 않도록 강제 매각 대신 상장 활성화와 같은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벤처협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벤처협회는 “글로벌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소유 지분과 지배구조 역시 이런 도전과 혁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물”이라며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구어 놓은 성과들을 정부가 ‘혁신 인프라’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지분율을 제한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어떤 기업가도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적인 도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국내 신산업 창업 생태계 위축과 벤처생태계의 혁신성을 떨어뜨려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승호 기자

한화비전

극한 환경에서도 ‘거뜰’

‘AI 보안 솔루션’ 선포

두바이서 ‘인터섹 2026’ 참가

한화비전이 중동 최대 보안 전시회에서 극한의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AI) 보안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한화비전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인터섹 2026’에 참가해 ‘비온드 이미징, 비온드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회사의 최신 기술들을 소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선 세계 최초로 공개된 ‘AI 러기다이즈드 PTZ(팬·틸트·줌) 카메라’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이카메라는 최저 영하 50도, 최고 영상 60도의 날씨를 견디며, 서리 제거 및 결빙 방지 기술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비전은 ‘인터섹(Intersec) 2026’에 참가해 AI 러기다이즈드 PTZ 카메라를 전시했다. /한화비전